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의견서 번호 : 24-21)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건 명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관련

1. 사업개요 (추진 일정 등)

□ 개 요

-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주거시설과 인접한 노후 축사에 이전 명령을 하고,
 - 같은 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려고 검토 중임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물건 이전 비용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에 이전 대상지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축사 운영을 폐업하거나 축사 이전으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까지 재정적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상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축사의 이전명령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수용이 아니므로 재정적 지원에는 이전 비용 또는 건축물 보상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관련 법령

-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사유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축사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이 외의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전 비용 또는 물건의 가격보상비 외에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른 축사 이전 명령에 의해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검토의견

-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에는 이전 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 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음
- 이와 관련 토지보상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 같은 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가축분뇨법의 축사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은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그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판시하고 있고,
- 환경부는 이 건에 대해 가축분뇨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물건의 가격 등을 축사 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 이외에 축사의 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보상절차, 보상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수질수생태과-1964, 2024. 5. 10.)

○ 이와 같이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등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가축분뇨법은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 이 외에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준용하여야 하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보상법의 의무 적용 공익사업에는 축사이전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 가축분뇨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토지보상법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장·군수가 축사 등의 소유자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영업 손실보상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